

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## 심의 · 의결

안전번호 제2022-011-067호  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
피 심 인 주식회사 ○○○ (사업자등록번호 : )  
광주광역시  
대표자  
의결연월일 2022. 6. 22.

## 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5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2.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# 이 유

## 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수소.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 사업자로서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,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소기업이다.

## II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. 12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이첩한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1. 행위 사실

피심인은 '17년부터 △△ 소재 사무실 내에 시설안전, 사내 보안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(이하 'CCTV') 1대를 설치·운영\*한 사실이 있다.

\* 설치 목적, 장소, 촬영 시간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포함된 안내판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

CCTV가 설치된 △△ 사무실은 팀 등 직원 명이 상주하며 업무를 하는 장소로 출입통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비공개 장소이다.

※ 피신고인 근로자 수 : 총 명(△△ 명), 별도의 노사협의회 없음

피심인은 CCTV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.

※ '19년 입사자부터는 입사 시 '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'로 동의를 같음했다고 주장하나 서약서 내용상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 내용 없음

### 2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.8.25. '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2021.9.16.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.

피심인은 “사무실의 CCTV는 사내 보안을 위해 ‘17년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제안으로 설치한 것으로 ① 직원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, 보안서약서를 통해 동의를 받았고, ② 동 사무실은 팀이 근무하는 곳으로 회원정보 유출사고 방지 및 사내 보안을 위해 CCTV가 설치된 경우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무자의 동의 없이도 CCTV 설치·운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”고 주장한다.

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 법령

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,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- ※ [참고]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CCTV 관련 보호법 적용(「CCTV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」)
- 보호법 제25조는 ‘공개된 장소’에 설치된 CCTV에 대해 규정한 조항으로,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공간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,
  - CCTV를 통해 수집·처리되는 영상정보 또한 개인정보이므로 피심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·처리하는 ‘개인정보처리자’에 해당하여 보호법 제15조를 적용

#### 2. 판단

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며, 피심인은 기업 자산 도난 방지, 시설 보안 등 업무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·운영하여 개인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해당하여, 그 구성원이나 출입·이용이 허가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(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), 그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·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(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) 등에 한하여 CCTV를 설치하여 개인영상 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다.

피심인은 ①직원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, 보안서약서를 통해 동의를 받았고, ②동 사무실은 팀이 근무하는 곳으로 회원정보 유출사고 방지 및 사내 보안을 위해 CCTV가 설치된 경우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6호에 따라 근무자의 동의 없이도 CCTV 설치·운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,

①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인지가 아닌 명시적 동의를 통해 가능하며, 피심인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약서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.

또한, ②영업 비밀 유출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·운영하는 것이 피심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, 직원들의 근무공간(책상) 및 컴퓨터 화면까지 지속적(24시간)으로 촬영하여 저장하는 것은 근무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된다.

따라서, 피심인이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·운영하면서 해당 근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.

## IV. 처분 및 결정

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가. 기준금액 산정

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1,000만원을 적용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이상위반
가.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	법 제75조 제1항제1호	1,000	2,000	4,000

## 나. 과태료의 가중

보호법 시행령 [별표2] 과태료 부과기준 1. 일반기준 라.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### < 과태료의 부과기준 1. 라. >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다. 과태료의 감경

피심인은 사전통지 기간 전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시정을 완료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%인 500만원을 감경한다.

### < 과태료의 부과기준 1. 다. >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이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1,000만원에서 50%를 감경한 500만원을 부과한다.

과태료 처분의 근거		과태료 금액 (단위:만원)			
위반 조항	처분 조항	기준 금액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 D=(A+B-C)
제 15조제 1 항	제 75조제 1 항제 1 호	1,000	-	500	500

☞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## 2. 처분 결과의 공표

보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피심인의 처분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					
순번	위반행위를 한 자	위반행위의 내용		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	
	명칭	위반조항	위반내용	처분일자	처분내용
1	주식회사 ○○○	법 제 15조제 1 항	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영상정보 수집	2022.06.22	과태료 부과 500만원
2022년 00월 00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					

#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 수집·이용)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, 보호법 제66조(결과의 공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의한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2022년 6월 22일

위 원 장      윤 중 인      (서 명)

부위원장      최 영 진      (서 명)

위      원      강 정 화      (서 명)

위      원      고 성 학      (서 명)

위      원      서 종 식      (서 명)

위      원      염 홍 열      (서 명)

위      원      이 희 정      (서 명)

위      원      지 성 우      (서 명)